

지역개발기금 활성화 나선다

두세훈 도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이율 2%, 그 밖의 사업 융자이율 2.5%를 모든 사업 1.75%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지역개발기금 조례는 지난 1989년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라북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14개 시·군에 도내 상하수도, 도로, 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2~2.5%)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1.8%)보다 높은 이율로 운용되어 시군의 융자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금 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두세훈 의원은 "최근 도 및 시군의 부채감축 기조와 높은 융자이율로 인해 융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예치금은 증가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군 등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신규융자 유도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위 조례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인하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됐다.

/김진성 기자



기념촬영하는 문 의장-여야4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날 한국당에서는 김진성 의원이 참석했다.

박용근 의원, "교장임기제도 취지 무색... 개선해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장 임기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교장 공모제의 개선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근 의원은 "교장 직위는 소수 교원에게만 주어지는 구조 속에 젊은 나이에 교장 승진시 학교장 등을 십수 년간 재임하게 돼 평교사들의 승

진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 교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있어 교장 공모제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많은 교사가 교장으로서는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교장 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최영일 의원, "참전 유공자 예우... 보훈수당 상향 절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21일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의 호국보훈수당 상향으로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광역시도는(전남, 충북, 충남 제외) 월 1만 원~15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만원

부터 최대 2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분담액의 전국 평균은 월 6만 원 수준. 그러나 전북도는 1만 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호국보훈수당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공자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참전유공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



는 아니더라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전국 시도 평균인 월 6만 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예우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 아니라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 중 이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승우 의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이 지났다"며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단 한 발자국의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로 나서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에 이바지하는 호혜적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 조치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문승우 의원은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국주영은 의원, 행정협의회 예산집행 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데도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다수의 행정협의회가 구체적인 집행 계획 없이 정액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보니 과다 책정, 과소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적립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68개 행정협의회 중 60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부담금을 집행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일반계좌에 보관·지출해 예산 총계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집행 내역에 대한 내·외부 감사가 없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협의회 구성의 본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출, 기부 또는 보조 불가단체 등에 금전적 지원, 각종 용역·업무위탁 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방만하고 부적절한 부담



금 사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행정협의회에 대한 조사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이전공공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라"

전북도의회, 혁신도시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

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에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와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조공·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우수 혁신도시 벤치마킹, 집행부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설립 움직임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기관 협의방문, 서한문 발송, 국회 방문 협조 요청 등을 한해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진성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나타나... 일관되게 지속"

文 대통령,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관련 입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가계 소득동향 상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추세, 유동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또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하위) 5분위 비



율이 줄어든 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 감소와 관련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NH 농협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여러분의 결엔 늘 농협이 함께합니다

장수군 농협일동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 김태호 •장수농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동조합 조합장 곽점용